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1553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4,742,2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7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김철환

별지

부동산 목록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 150㎡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벽돌조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57.24㎡, 2층 35.70㎡ ㎡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 원고는 소의 C (주민등록번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D ☐ , E 호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C 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 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특한 약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소의 주식회사 F 은 2014. 1. 2. 위 C 에게 금 2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신용대출약정서 참조).

그런데 위 C 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회사는 2016. 9. 20. 원고에게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 를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43807), 2020. 1. 17.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음 달 18.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C 는 원고에게 금 3,222,513원 및

그 중 금 870,448원에 대하여 202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소의 G 주식회사는 2013. 9. 30. 위 C에게 금 5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8. 9. 30.,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6.5%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5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C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회사는 2015. 8. 3. 소의 H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1, 2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H는 2018. 10.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 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 1, 2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 며(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00481), 2020. 11. 4.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 었으며, 같은 달 24. 확정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C는 원고에게 금 21,519,767원 및 그 중 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2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8호증 채권계산서 참 조).

(3) 소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2)항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 24,742,280원입니다(3,222,513원 + 21,519,767원).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어머니는 소위 I였는데, 위 I는 2022. 4. 11. 사망하였고, 위 C는 위 I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위 I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2. 11. 11.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갑 제9호증의 1, 2 각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후 피고는 위 부동산을 2023. 3. 22. 소위 J에게 매각하여 다음 달 24.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조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C의 재산인데, C는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 바, 위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 (1) 따라서 C 및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까.

(2)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진인 2011. 10. 31. '채권 최고액 금 55,200,000원', '근저당권자 K'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23. 5. 12.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습니다(갑 제9호증의 1, 2 각 참조).

따라서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전술하였던 2023. 10. 4.까지의 원리금 채권액인 금 24,742,28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I는 2022. 4. 11.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L과 자식들인 B(피고, 수익자), C(채무자), M이 있었습니다(갑 제10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1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갑 제12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채무자 C와 피고는 남매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2/9입니다.

나. 위 I는 2022. 4. 11. 사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2. 11. 1.'입니다(갑 제12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22. 11.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2/9 지분은 채무자인 소외 C가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만이 상속 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12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2. 채무자 C의 무자력

가. 법원행정처의 2023. 11. 17.자 회신에 의하면, 위 C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2. 11. 1.)를 거쳐 조희원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없습니다(적극재산의 부재).

나. N의 2023. 11. 16.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의하면, C는 위 사해행위 당시(2022. 11. 1.)

① O에 금 7,422,000원(2014. 11. 26. 연채등록, 2022. 11. 26. 연채해제)

[위 회답서 중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1쪽 참조]

[사해행위(2022. 11. 1.) 이전 연채가 발생하였다가 연채해제된 채무들입니다]

[위 연채해제는 C가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연채 등록 후 7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 N에서는 연채 등록 후 7년이 경과하면 연채상태를 해제처리하고 있는 바, 위 내역을 살펴보면 연채 등록 후 정확히 7년이 경과한 때에 연채가 해제처리 되었습니다]

② 원고에 금 5,870,448원(870,448원, 5,000,000원 ; 원금 기준,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무임)

등 **합계 13,292,44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위 채무는 이자는 제외한 '원금'만에 대한 것인데,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더 클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이 적극재산은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C]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 그로 인해 [C]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 관련

가. 이미 밝혔듯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이전** 설정되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K])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고, 사해행위 이후 소의 [J]에게 매각되었는 바,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피고가 2023. 3. 22. 소의 [P]에게 매각한 매매대금액, 갑 제1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목록' 참조).

[Q]은행의 2023. 11. 9.자 회신에 의하면, 사해행위 당시(2022. 11. 1.)의 피담보채무액은 55,200,000원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 가액(3억 8,000만 원)에서 위 채무액(55,200,000원)을 공제한 324,800,000원 중 채무자 [C]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금 72,177,777원(324,800,000원 × 2/9 지분, 원미만 버림)이 위 부동산에서 위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원고의 피보

전채권액 24,742,280원과 위 책임재산 72,177,777원 중 더 적은 금액인 24,742,28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손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